시선

사설

이제 교육의 추는 학생으로 옮겨갈 때

2017학년도 한 해 동안 경희옴부즈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수업 문제였다. 전체 117건의 민원 중 25건, 학생 민원으로만 좁히면 68건 중 25건이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업 민원을 두고 경희옴부즈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의 내용,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교·강사의 태도와 강의 중 발언까지도 교육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경희옴부즈라는 제도적 창구 외에도 SNS상에서 수업을 비판하는 주장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교수의 차별적·혐오성 발언은 즉각 학내외로 공유되며 논란을 낳는다. 2017년 '빅뱅에서 문명까지' 강의 중엔 교수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 "수업 준비를 안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6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천 개의 공감' 강의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교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케케묵은 강의 자료와 맥락 없는 '막말'은 모두 교수가 가진 학문적 권위 뒤에 숨어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됐었다. 이젠 시대가 변했다. 최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인권의식과 함께 성장한 세대다. 천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교육서비스의 고객'으로 합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더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권위를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는 때는 지난 것이다.

이미 3년 전에 '미래대학리포트2015'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을 요구했다. 전문가보다는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교수상을 원했다. 학생들은 미래에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으로 '정신적 스승'을 기꺼이 꼽았다. 미래에도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강의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7년 초 우리 신문이 진행한 구성원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교육의 질 확대를 우리학교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보다 나은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대학본부 또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대학리포트나 대학혁신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대학 내부에 교육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있었던 방증이겠지만 당장 바뀌는 것은 많지 않다.

지금껏 사회나 대학이 교수에게 바랐던 가치는 교육보다 연구에 보다 무게가 실려 있었다. 대외의 각종 대학 평가는 교수의 연구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경희 fellow 제도'가 교육 부문 포상을 실시했으나 이전까지는 이를 위시한 각종 평가와 포상 역시 연구가 중심이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강의평가 정도에 국한됐다.

2003년 연세대가 도입한 이후 대학가에 완전히 자리 잡은 비전임교원 역시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우리학교에서 행해진 강의의 43.2%는 비전임교원의 몫이었다. 정규직 교수 절반 정도의 연봉에 제대로 된 시설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하라고 요구만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제도와 지원책을 고민하고, 학생은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며 교수 개개인 역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 주의 주제 - 학식논란

학생은 을이 아니다

신정인 기자
sji0201@khu.ac.kr

개강 후 한 달이 지났다. 곧 중간고사도 찾아온다.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종강일만 멀어 보인다. 학교 밖에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한다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종강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일, 그것도 30여 년 만에 헌법을 수정하는 굵직한 투표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학교도 얼마 전 학생대표를 뽑는 재선거를 치렀고 한쪽에선 총장 선출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온다.

그렇지만 생활 속 민주주의는 꼭 투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인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노력 모두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이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학교행정에 불만을 품고 직접 이를 해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학사지원과의 학점포기제도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경희옴부즈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3개월 동안 홀로 학교와 맞섰다. 고군분투 끝에 학점포기제도 개정안 4년 유예기간을 이끌어 냈다. 그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행정실 앞에서 을의 입장이 돼야 하는 것은 부조리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한편, 국제캠퍼스는 개강 직후부터 학생식당의 가격 인상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사실 학생식당에 대한 불만은 국제캠퍼스 학생에겐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화두다. 학식은 늘 '돈값을 못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이 불만에 불을 지핀 기폭제일 뿐이었다.

학생이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업체를 변경하든 직영화를 하든 싼값으로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라는 것. 직영화 논의는 물론 어렵고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위탁 급식업체의 주장과 그런 업체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학교의 사정이 뒤엉켜 있다.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학식의 절대적인 소비자인 학생에게 외면당하는 학생식당에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은 떠나지 않는다.

관련 기사가 게재된 후 학생들이 보인 관심은 뜨거웠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적 상황을 많은 구성원이 인식했고 그들이 바라는 바가 명확하다면 변화를 위해 움직일 때다.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학식을 먹고 싶다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다. 또한, 학교는 구성원을 위해 응당 그리해야 한다. 학점포기제도 개정안 유예를 이끌어낸 그가 말했듯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학생이 학교 앞에서 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서로 편 가르다보면 민주주의 가치 잃게 돼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째다. 한국 근현대사는 이 좁은 땅에서 편을 갈라 싸운 역사였다. 제주 4.3 사건은 그 편 가르기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역사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쉽게도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각자의 편의에 의한 적대적 이름 붙이기 작업은 그 호칭과 형태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뿐,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호명을 통한 빨갱이, 종북, 친노, 친박 등 정치적 편 가르기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일베, 메갈, 한남, 맘충 등 젠더의 영역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편'이 공유하는 합리성을 두르고 내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은 그르다는 극한의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화됐다.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치열히 대립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 사이 극한의 이념 대립 속에서 이러한 편 가르기와 상관없던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비극이다. 1948년부터 1954년 9월 까지, 제주도민의 10% 이상이 이념 대립에 휘말려들었다.

당시 좌익과 우익 모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상대의 단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반대편이 지는 장면을 연출해야 했다. 극과 극이 가장 저열한 수단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생을 영위하던 힘없고 약한 일반인에 반대편의 이름을 붙여 박해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젠더 갈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가 SNS에 글을 쓰면 그 글을 어떻게든 물어뜯어 대립의 싸움터에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자연스럽게 그 글을 변호하려는 사람도 몰려든다. 발언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저열한 설전이 시작된다. 논리와 이성은 오간데 없고 대부분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이다.

완벽히 편이 갈라진 온라인에서, 처음 글을 썼던 글쓴이의 해명마저 또 다른 싸움의 재료로 사용될 뿐이다. 70년 전 제주에서 좌우가 편을 나눠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애꿎은 민간인을 희생양 삼은 것처럼, 2018년 온라인에선 본인의 합리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개개인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한 것이 정답에 근접하다고 믿으며 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생각을 핍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서로 한 발자국, 딱 한 발자국만 물러나 상대방의 일부만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전혀 모르는 상대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한없이 적대해야할 원수가 아닌 함께 나아갈 동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학은 지금

연세대 2년째 '비대위' 체제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김수혁 기자 shrek@khu.ac.kr

성폭력 의혹을 받은 동덕여대 하일지(문예창작학) 교수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폭력 의혹' 하일지 교수 "사과할 것도, 철회할 발언도 없다"/중앙일보, 2018.03.19)** 기자회견 장소에서 학생들은 피켓을 들고 하 교수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하 교수는 이를 거절하며 "강단에서 물러나 작가의 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내 '미투 운동'을 지지했으며 학교 측에 인권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 연대가 사회학과 H교수의 징계 결정 시기를 두고 학교를 상대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회학과 H교수 인권폭력 사건 대응 학생연대' 행정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대학신문, 2018.03.25)** H교수가 학생인권 침해와 연구비 횡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가 늦어지자 학생 연대는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학생 연대는 H교수 파면, 징계지연에 대한 총장의 사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입장 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다수의 대학이 정작 재정난을 타계할 기부금 유치에는 소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호소하는 대학, 발전기금 유치에는 무관심?/한국대학신문, 2018.03.24)** 국내 사립대의 기부금은 전체 수입총액 대비 1.7%에 불과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 해외 대학에 비해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직고용에 대해 총장은 "직고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4명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진전없던 청소노동자 사태, 직접고용이 해결책으로 부상하나/동대신문, 2018.03.26)** 총장의 공개적 답변은 파업 시작 52일 만에 처음이었으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민노총) 측은 "합의 과정을 거쳐 협상이 타결돼야 농성 해제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동국대 총학생회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민노총 측은 "학교 관계자가 부재한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불참했다.

지난 13일 연세대 54대 총학생회 보궐 선거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총학생회 공백' 초유의 사태, 학생사회는 어디로 흘러가는가?/연세춘추, 2018.03.17)** 연세대는 2년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원주캠퍼스도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루지 못해 사상 최초로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는 인촌 김성수의 잔재 청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인촌 흔적 지우기 촉구 기자회견/고대신문, 2018.03.12)**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려대 서울총학생회 측은 2월 15일 본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촌 동상을 비롯하여 학내의 인촌 잔재들을 청산하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성수의 동상 앞에는 그가 쓴 기고문에서 발췌한 '나는 교육자의 양심에서 말한다! 제군아, 의무에 죽으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